

# 한국 기업 환경의 현주소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박가희 연구위원(gaheebak@korcham.net)

최근 주요국들은 산업경쟁력 확보와 기술 주권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DI) 흐름도 전략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 유입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고,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투자 역시 해외로 향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이는 한국 내 기업 환경이 국내외 기업의 입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는 국제 비교 지표(OECD PMR, WBES 등)와 정량 분석(t-test)을 통해 한국 기업 환경의 구조적 특성과 기업들의 체감도가 낮은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금융 접근성, 노동 및 세금 규제가 기업의 투자 및 사업 전환과 같은 전략적 의사결정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규제 유연성, 외국인 투자 개방성 등의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 정비 및 기업들의 체감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실증 테스트베드 기반의 규제 유연성 제고, 중소·비우량 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및 자본시장 기반 확충, 노동 유연성 확보, 인센티브 체계의 예측 가능성 강화, 산업·지역 연계형 FDI 전략 전환 등 5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 I. 서론

-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sup>1)</sup>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이들 국가는 보조금, 세제 혜택, 규제 유예 등 유인체계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는 경제적 목표 뿐 아니라, 생산시설의 자국 내 설치, 부품

조달 요건 등 명시적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기술 주권 확보 같은 안보적 목표까지 포괄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국가 차원의 산업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으로 볼 수 있음

\* 본 자료는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대한상공회의소 및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ustainable Growth Initiative)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1) 최근 중국도 「중국제조2025」의 차기 계획인 「중국제조 2035」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 제조 분야의 자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

[표 1] 주요국의 제조업 유치 전략 및 인센티브 정책

|    | 대표 프로그램                             | 지원 내용                                                                                                                                                                      |
|----|-------------------------------------|----------------------------------------------------------------------------------------------------------------------------------------------------------------------------|
| 미국 | CHIPS & Science Act (20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도체 R&amp;D, 제조 등 570억 달러 지원금</li> <li>시설·장비 투자 25% 세액공제</li> <li>One-stop application system 운영</li> </ul>                         |
|    | Inflation Reduction Act(IRA) (20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정에너지(전기차 포함) 부문 세액공제, 보조금 등 7,830억 달러</li> </ul>                                                                                   |
| EU | Critical Raw Materials Act (20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U 내 핵심원자재(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 및 확보</li> </ul>                                                                               |
|    | European Chips Act (20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 R&amp;D, 설계 등 반도체 공급망 전반 430억 유로</li> </ul>                                                                                     |
|    | Net-zero industry Act (20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지원, 인허가절차 간소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li> </ul>                                                                                            |
| 일본 | 반도체 산업 지원 패키지 (2021-20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SMC, Rapidus 등 주요 기업 생산 시설 유치 지원 등 3.9조 엔</li> <li>시설 투자 최대 40% 보조금 제공</li> <li>국가 중요 프로젝트 지정을 통해 신속한 처리, R&amp;D 규제 유예</li> </ul> |
|    | 반도체·AI 산업 지원 정책 (2024-20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산업 육성에 10조 엔 보조금 지원</li> </ul>                                                                                                   |

□ 글로벌 산업정책의 변화는 글로벌 외국인 직접 투자(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흐름에도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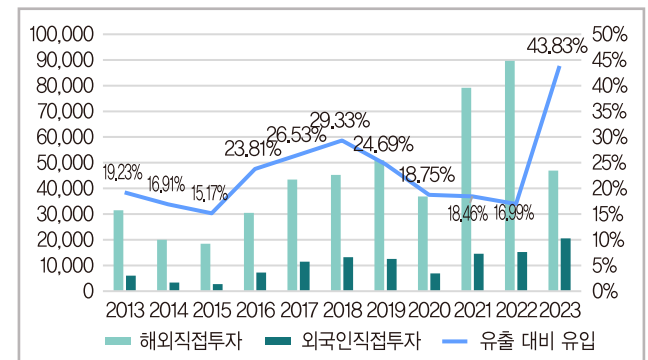
- 자국 내 생산기반 조성을 조건으로 한 인센티브는 기업들의 입지를 주요국으로 집중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으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경쟁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실제로 최근 5년간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순위에서 평균 17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해외직접투자(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외국인직접투자(IFDI)의 약 2.3배에 달하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표 2]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상위 5개국 및 한국 순위 변화(2019-2023) (단위: 억달러)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1위     | 미국 (2,425)   | 아일랜드 (1,093) | 미국 (3,861) | 미국 (3,358) | 미국 (2,712) |
| 2위     | 아일랜드 (1,638) | 미국 (959)     | 캐나다 (604)  | 프랑스 (764)  | 캐나다 (462)  |
| 3위     | 독일 (546)     | 독일 (697)     | 독일 (513)   | 호주 (634)   | 스페인 (431)  |
| 4위     | 캐나다 (505)    | 룩셈부르크 (437)  | 스페인 (353)  | 스웨덴 (551)  | 프랑스 (423)  |
| 5위     | 영국 (499)     | 멕시코 (282)    | 일본 (343)   | 스페인 (516)  | 멕시코 (363)  |
| 한국     | 19위 (126)    | 20위 (69)     | 13위 (146)  | 19위 (152)  | 17위 (206)  |
| OECD평균 | 122          | 61           | 130        | 105        | 60         |

자료: OECD Data Explorer, flow 기준

[그림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및 유출 대비 유입 비율(2013-2023) (단위: 백만달러)



자료: OECD Data Explorer, flow 기준

□ 아울러,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복합적인 대외 환경 변화는 글로벌 통상 질서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음

- 미국의 관세정책, EU의 전략적 자율성<sup>2)</sup>강화 기조, 중국의 제조업 내재화 전략이 맞물리면서, 기존 국제 분업 구조가 흔들리고 기업의 투자 및 입지 결정 요인이 급변하고 있음

2) 전략적 자율성(strategy autonomy)은 외부 국가에 대한 경제, 기술, 안보 측면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역량과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정책 방향을 의미함

□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제조업 기반 약화와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 기반 재정비와 기업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전략산업 중심의 글로벌 정책 기조는 생산시설의 자국 내 설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통제 등 선별적 개방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만으로는 실질적인 투자 유치가 어려운 구조로 변모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내 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자발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 특히 시장 규모나 지리적 조건 같은 단기간에 극복하기 어려운 외생적 제약보다는 제도적 여건과 규제 환경 등 개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World Bank Enterprise Survey, R&D 세액공제 및 조세지출 관련 지표 등 다양한 국제 지표를 활용하여 한국의 기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각 지표는 제도적 여건, 외국인 투자 개방성, 혁신 유인, 기업 체감 등 기업 환경의 핵심 구성 요소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며, 국가 간 비교와 시계열 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제공

○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여건개선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II 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혁신, 투자 인센티브, 전략산업 육성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과, 국제지표 평가를 중심으로 기업환경의 제도적 여건과 구조적 특성을 살펴봄

－ III 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투자와 경영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업환경의 제도적 효과와 체감 간 간극을 점검하고자 함

## II. 한국의 기업 환경 개선 노력과 평가

### 1) 제도적 개선 노력

□ 정부는 국내 투자 기반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음

○ 특히 규제 완화, 기업 지원 인센티브 확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전략산업 육성 등 다각도의 정책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음

□ 규제개혁은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이후 총량 관리, 정보화,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제도적 토대를 점진적으로 마련해왔으며, 최근에는 신산업 중심의 유연한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음

○ 2018년 일부 업종과 기술에 대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sup>3)</sup>를 추진하고 2019년에는 규제샌드박스<sup>4)</sup>를 시행

－ 기존의 엄격한 사전허가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

3) 미래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해 우선허용·사후 규제를 적용

4)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우선 출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

○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규제비용감축제<sup>5)</sup>와 규제심판제<sup>6)</sup>를 도입

○ 국정기획위원회는 「2025 성장전략」에서 규제의 근본적인 목적과 범위를 재정립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는 통합투자 세액공제, 정책금융, 지방 보조금, 유턴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경감하고, 전략산업 및 비수도권 중심의 유인을 강화해 옴

○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최대 2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업의 입지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다만, 연장을 반복하는 형태의 세액공제 일몰제<sup>7)</sup>, 지자체 간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예산 격차, 승인 과정의 시차 등은 제도의 장기적 안정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있음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은 조세 감면, 현금 지원, 인허가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음

○ 기존의 투자 유치 제도는 일반적인 목적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 최근에는 첨단산업과 전략기술 기업 유치를 위한 방향이 모색되고 있음

○ 비수도권 투자에 대한 국비 부담 확대와 R&D 센터 현금지원 한도 상향 등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의 다양하고 복합적

인 입지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 패키지는 보완이 필요

□ 전략산업 중심 정책은 국가 전략의 초점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으로 이동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sup>8)</sup> 제정(2022)을 통해 제도적 토대를 구축

○ 특화단지 지정, 기술 유출 방지, R&D 인프라 지원 등 다각적 접근을 시도하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2023년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산업 특화단지 등을 지정 및 지원 계획을 발표<sup>9)</sup>

□ 그러나 전력, 용수, 숙련인력 등 인프라 부족과 중소기업 및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성 부족은 물론, 투자 유치 전략이 보조금과 세제 혜택 같은 재정 인센티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은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러한 접근은 민간 부문의 자발적 투자 결정보다 정부 지원에 더 크게 좌우되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잠재적인 유인 왜곡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음

□ [표 3]에 요약된 정책들은 규제 완화, 비용 유인, 투자 개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왔음을 보여줌

○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국제 지표를 통해 이러한 정책들이 반영된 한국의 기업 환경이 국제적으로 어떤 상대적 특성을 보이는지와, 기업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5) 'One In, Two Out'룰을 도입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면, 기존의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

6) 규제개선 과제를 접수·발굴하고 규제심판부가 심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

7)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 부문도 2024년 12월 31일 일몰예정이었으나 2027년까지 연장된 바 있음

8) 국내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특별 지정, 신속 처리 절차,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조치 등이 포함되며, 외국인 투자 시 별도 승인을 요구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의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

9) 관계부처합동,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2023.4.18.

[표 3] 한국의 기업 환경 조성 정책 요약

|             | 주요 정책                                                                                                                  | 정책 방향                                                                                              | 정책평가 및 한계                                                                                      |
|-------------|------------------------------------------------------------------------------------------------------------------------|----------------------------------------------------------------------------------------------------|------------------------------------------------------------------------------------------------|
| 규제혁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샌드박스</li> <li>● 포괄적 네거티브</li> <li>● 규제비용감축제</li> <li>● 규제심판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산업 중심 유연화</li> <li>● 민간 체감도 제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연성 확보와 제도적 예측 가능성 강화 노력</li> </ul>                   |
| 기업 인센티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투자세액공제</li> <li>● 정책금융</li> <li>● 지방 보조금</li> <li>● 유턴기업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투자유인</li> <li>● 지역 차등 지원</li> <li>● 일몰 연장 이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간 편차</li> <li>● 정보비용</li> <li>● 지속가능성 부족</li> </ul> |
| 외국인직접 투자 유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 감면</li> <li>● 현금 지원</li> <li>● 외투자지역 인허가 간소화</li> <li>● 전략산업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유치→첨단 중심 전환</li> <li>● 비수도권 우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패키지 미비</li> <li>● 수도권 제약</li> </ul>               |
| 전략산업 중심 전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특화단지, 기술보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망·기술안보 연계</li> <li>● 첨단 외투 유치 강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프라 부족</li> <li>● 산업 생태계 연계성 부족</li> </ul>            |

## 2) 기업 환경의 제도적 여건 및 정책 유인에 대한 국제 비교

□ 한국은 규제 완화, 기업 지원 인센티브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노력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음

○ 본 절에서는 국제 지표를 통해 이러한 정책들이 반영된 한국의 기업 환경이 국제적으로 어떤 상대적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함

– ① 법·규제 등 제도적 여건과 ② R&D 및 재정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분석

### ① 법·규제 등 제도적 여건

□ 한국은 낮을수록 양호함을 나타내는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를 기준으로, 2018년 대비 규제 환경 전반에서 개선을 이룬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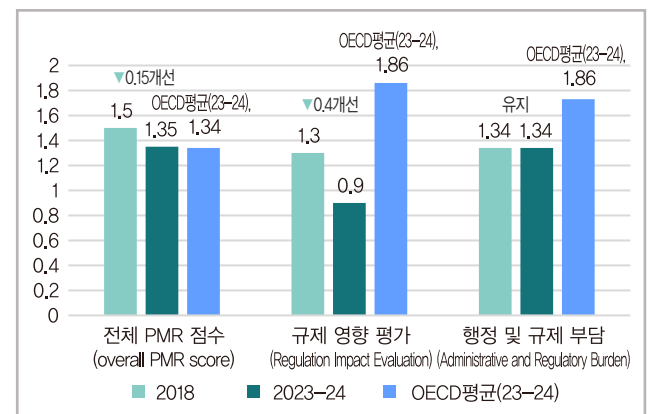
○ 특히, 규제 수립과 사전·사후 평가제도 및 투명성 수준을 나타내는 ‘규제영향평가’ 항목은

2018년 1.3에서 2023–24년 0.9로 상당히 개선되어 두드러진 향상이 확인됨

○ ‘행정 및 규제부담’ 지표는 창업과 관련된 행정 절차의 전반적인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데, 2023년 기준으로 1.34를 기록하여 OECD 평균인 1.73보다는 낮은 수준

– 그러나 ‘규제영향평가’ 지표의 개선과 달리 점수가 유지되고 있어, 행정 절차의 효율성 면에서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2] 한국의 PMR 지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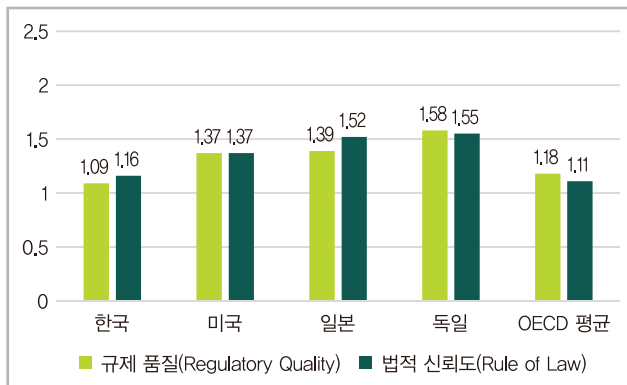


자료: OECD PMR economy-wide Indicators

□ 한국의 규제 품질<sup>10)</sup> 및 법적 신뢰도<sup>11)</sup>는 World Bank 지표 기준으로 OECD 평균과 유사하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최근 전략적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정책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의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

[그림 3] 주요국의 규제 품질 및 법적 신뢰도 비교 (2019~2023년 평균)



주: 두 지표 모두 -2.5~2.5의 값을 가지며, 값이 높을수록 거버넌스 수준이 우수하다는 의미

자료: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2024 Update, World Bank (www.govindicators.org)

□ 한국은 FDI 제한지수(FDI Restrictiveness Index)<sup>12)</sup>에서 전반적으로 개방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지분 및 핵심 인력 제한 등 특정 항목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장벽이 존재

[표 4] 자본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방성 수준

|                                                    | 2018   | 2023   | OECD평균 (2023) |
|----------------------------------------------------|--------|--------|---------------|
| 총 지수                                               | 0.1048 | 0.1048 | 0.1190        |
| 심사 및 승인(Screening and Approval)                    | 0      | 0      | 0.0136        |
| 외국인 지분 한도(Foreign Equity Limit)                    | 0.0970 | 0.0970 | 0.0259        |
| 핵심 외국인 인력 제한(Restriction on Key Foreign Personnel) | 0.0024 | 0.0024 | 0.0009        |
| 기타 제한(Other Restriction)                           | 0.0055 | 0.0055 | 0.0089        |

자료: OECD FDI Restrictiveness Index

- 이는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 측면에서 투자 유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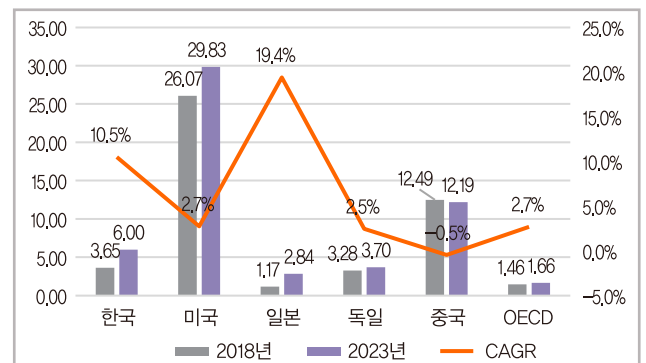
## ② R&D 및 재정 인센티브

□ 한국의 R&D 정책은 정부의 직접 지원과 세제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구조로, 직접 재정지원 규모는 일본, 독일, 중국<sup>13)</sup> 등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GDP 대비 비중([표 5])은 OECD 평균의 2배 이상으로,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4] R&D에 대한 정부 직접 재정지원

(단위: Billion, USD PPP)



주: 독일과 OECD는 2023년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직전 2개년 평균 사용  
자료: OECD R&D tax incentives

[표 5] R&D 부문 GDP 대비 정부 직접 재정지원 비중 (단위: %)

|        | 2021  | 2022  | 2023  | 3개년 평균 |
|--------|-------|-------|-------|--------|
| 한국     | 0.209 | 0.220 | 0.222 | 0.22   |
| 미국     | 0.105 | 0.125 | 0.125 | 0.12   |
| 일본     | 0.026 | 0.036 | 0.050 | 0.04   |
| 독일     | 0.073 | 0.073 | 0.073 | 0.07   |
| 중국     | 0.053 | 0.046 | 0.040 | 0.05   |
| OECD전체 | 0.088 | 0.095 | 0.091 | 0.09   |

주: 독일과 OECD는 2023년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직전 2개년 평균 사용  
자료: OECD R&D tax incentives

10) 정부가 민간 부문의 발전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과 규제를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정책의 건전성, 민간 친화성, 실행 역량 등을 포괄

11) 사회 구성원들이 법과 규칙을 얼마나 신뢰하고 준수하는지를 측정하며, 특히 계약 이행, 재산권 보호, 사법 제도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12) 0에서 1까지의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도적 장벽이 낮음을 의미. 법적 조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협정 이행 여부나 특정 투자 대상의 특혜와 같은 세부적인 측면은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투자 개방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3) OECD 회원국은 아니나 기술추격국(technology catch-up country)으로 비교 대상에 포함하였음

□ [그림 5]의 R&D 간접적 세제 인센티브 규모를 살펴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은 5.22억 달러(PPP 기준)로 일본(9.02), 미국(29.03), 중국(69.83)에 비해서는 낮지만 독일(0.57)<sup>14)</sup>과 비교했을 때는 높은 수준

○ [표 6]의 GDP 대비 비중은 2021~2023년 평균 0.16%로 OECD 전체(0.13%), 미국(0.13%), 일본(0.14%)을 상회

– 단, [그림 5]와 같이 금액 기준으로는 중국 및 주요 선진국들과 여전히 격차가 존재함

– 특히, 중국의 2023년 급격한 증가가 관찰됨

□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유인 및 지속 가능한 기술축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의 전략적 설계가 필수적임

○ 실제로 OECD(2023)<sup>15)</sup> 보고서와 Choi, Li and Lee(2024)<sup>16)</sup>의 연구는 한국의 R&D 재정지원이 효율성이 낮고, 기업 규모, 지역, 산업 간 격차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첨단산업 중심의 R&D 인센티브 설계에는 명확한 전략성과 구체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

[표 6] R&D 부문 GDP 대비 정부 간접 지원 비중 (단위: %)

|        | 2021  | 2022  | 2023  | 3개년 평균 |
|--------|-------|-------|-------|--------|
| 한국     | 0.123 | 0.160 | 0.193 | 0.16   |
| 미국     | 0.118 | 0.123 | 0.141 | 0.13   |
| 일본     | 0.118 | 0.136 | 0.160 | 0.14   |
| 독일     | 0.000 | 0.004 | 0.011 | 0.01   |
| 중국     | 0.178 | 0.243 | 0.210 | 0.21   |
| OECD전체 | 0.126 | 0.128 | 0.127 | 0.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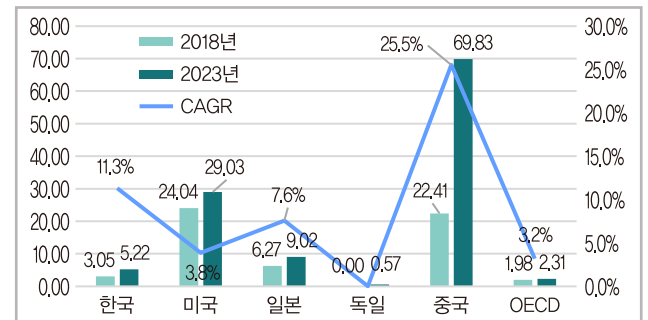
주 1) 중국과 OECD는 2023년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직전 2개년 평균 사용

2) 미국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2019~2021년 자료 사용

자료: OECD R&D tax incentives

[그림 5] R&D 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정부 간접 지원

(단위: Billion, USD PPP)



주: 독일과 OECD는 2023년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직전 2개년 평균 사용  
자료: OECD R&D tax incentives

□ 한편, GDP 대비 전체 조세지출(조세특례를 통한 재정 지원)<sup>17)18)</sup> 비중은 2018년 2.25%에서 2.93%로 증가하며, 조세 감면 등 세입을 줄이는 방식의 재정지원이 확대되는 추세<sup>19)</sup>를 보임

○ 같은 기간 동안 투자 유치(4.03%→0.24%), 제조업 육성(2.29%→0.75%), 지식집약 활동 지원(0.04%→0.02%) 등 전략 산업 및 혁신 활동을 뒷받침 하는 분야의 조세지출 비중은 축소됨

○ 이는 전체적인 조세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업의 투자와 기술 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보여줌

[표 7] 2018년 및 2022년 조세지출 비중

|                   | 2018   | 2022   | 변화 해석      |
|-------------------|--------|--------|------------|
| 전체 조세지출 규모(GDP대비) | 2.25%  | 2.93%  | 0.68%p 증가  |
| 투자 유치             | 4.03%  | 0.24%  | -3.79%p 감소 |
| 제조업 육성            | 2.29%  | 0.75%  | -1.54%p 감소 |
| 지식집약 활동 지원        | 0.04%  | 0.02%  | -0.02%p 감소 |
| 중소기업 보호 · 육성      | 12.12% | 14.65% | 2.42%p 증가  |

주 1) 각 목적은 전체 조세지출 대비 비율

2) 조세지출은 세수포기접근법(Revenue Forgone Approach)으로 세액 공제, 면세, 감면 등으로 인해 실제로 징수하지 못한 세수를 통해 산정  
자료: Global Tax Expenditure Database

14) 독일의 세액공제제도(Forschungszulagengesetz)는 2020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정부 보조금과 기금 형태로 지원되어 제도 운영 규모가 제한적이었음. 또한 균형 재정(Balanced Budget Rule, Schuldenbremse)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

15) OECD (2023), OECD Reviews of Innovation Policy: Korea 2023, OECD Reviews of Innovation Polic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dcf9685-en>.

16) Choi, Y., Li, S., & Lee, H. (2024). Korean Paradox of Public Support fo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in the Sustainable Performance of the Regional Economy. Land, 13(6), 759.

17)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은 '일반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special tax treatments)를 통한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로 정의(김성태 · 유한욱(2013),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방안」, KDI)

18) 국가 간 제도 차이와 집계 방식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조세지출의 국제비교에는 해석에 제약이 있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조세지출 내 정책 목적별 비중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봄

19) 기획재정부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18) 44.0조원, ('22) 63.5조원, ('24) 71.4조원(전망)으로 절대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Ⅲ. 기업환경체감과 기업행동 간 연관성 분석

□ 국제 지표를 바탕으로 파악한 한국의 기업 환경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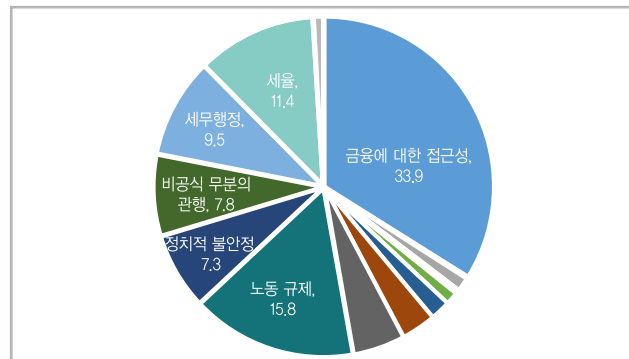
- 한국은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 투자 유인책 등 제도적·재정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축적해 왔으며, 국제 지표상 다수 항목에서 OECD 평균을 유지하거나 상회하고 있음
- 그러나 제도적 신뢰성, 외국인 투자 개방성, 조세 유인 수단의 전략성 등 구조적 측면에서는 주요국들과 비교해 여전히 격차가 존재
- 따라서 정책 수단 간 연계성 강화, 규제 집행의 일관성 확보,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유인책 설계 등에 대한 더욱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 본 장에서는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영역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체감 요인이 기업의 행동에 어떤 차이를 유발하는지 분석해보고자 함

#### 1) 기업환경체감

- World Bank의 기업조사(Enterprise Survey, WBES)<sup>20)</sup>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꼽은 주요 애로 요인은 금융 접근성(33.9%), 노동 규제(15.8%), 세무 행정(9.5%) 순으로 나타났음<sup>21)</sup>
- 이는 앞서 살펴 본 규제개선노력 및 제도적 정비와는 별개로,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이 자금 조달, 고용 유연성, 세제 운영 등 근본적인 구조적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함

[그림6] 2024년 한국 기업 환경의 가장 큰 장애물 (Biggest Obstacle) (단위: %)



자료: World Bank Enterprise Survey

□ [표 8]에 나타나듯이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은행 등 간접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금융 접근성에 대한 제약 인식도 OECD 평균(68.1)을 웃도는 76.7로 나타남

- 한국 기업의 은행 자금 조달 투자 비중은 27.9%로, OECD 평균(9.7%)과 동아시아 및 태평양(East Asia and Pacific, EAP) 평균(12.9%)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을 보이며, 운전자본 조달, 은행 대출/신용한도 보유율 등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임
- 내부 자금 조달 비중은 64.2%로 OECD 평균(81.2%)보다 낮아, 은행 등 외부조달을 통한 자금조달 구조가 뚜렷하게 드러남

□ 반면, 최근에는 직접금융(채권, 주식 등) 기반의 자금조달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2020~2024년 연평균 기준으로 직접금융 조달 규모(232.7조원)는 간접금융(89.2조원)의 약 2.6배에 달하며, 같은 기간 직접금융은 연평균 10.2% 증가한 반면 간접금융은 연평균 11% 감소<sup>22)</sup>
- 이는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은행 대출 금리와 여신 규제 등으로 인해 일부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함

20) WBES는 조사 주기의 불규칙성과 국가별 조사 연도 차이로 인해 2024년 단일 연도 자료만 활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기업 체감도의 추세 분석이나 정책 개선의 인과 관계 분석에는 제약이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현황 진단에 초점을 두어 해석함

21) 2024년 조사에는 1,518개의 기업이 포함되었으며 대기업 396개, 중견기업 636개, 소기업 484개로 구성(<https://www.enterprisesurveys.org/en/data/exploreconomies/2024/korea>)

22) 직접금융: 194.5조(2020)→287.1조(2024), 연평균성장률(CAGR) 10.22%, 간접금융: 107.3조(2020)→67.4조(2024), 연평균성장률(CAGR) -10.97%.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표 8] WBES상 한국 금융 부문 지표(2024)

| 지표                                                 | 한국    | EAP 평균 | OECD 평균 | 전체    |
|----------------------------------------------------|-------|--------|---------|-------|
| 투자 자금 조달 목적 은행 이용 기업 비중                            | 46.4% | 24.1%  | 18.5%   | 26.4% |
| 내부적으로 자금 조달된 투자 비율                                 | 64.2% | 78.6%  | 81.2%   | 73.6% |
|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 비중                                | 27.9% | 12.9%  | 9.7%    | 14.3% |
| 운전 자본 조달을 위한 은행 이용 기업 비중                           | 47.9% | 26.6%  | 19.7%   | 28.1% |
| 은행 대출/신용 한도 보유 기업 비중                               | 50.4% | 29.6%  | 35.6%   | 34.7% |
| 부분 신용 제약을 받는 기업 비중                                 | 12.5% | 10.9%  | 4.2%    | 16.1% |
| 대출 신청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불리한<br>금리, 담보, 절차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 | 8.9%  | 18%    | 5.1%    | 23%   |
| 금융 접근성 제약에 대한 인식 지수*                               | 76.7  | 77.9   | 84.6    | 68.1  |

주: \*표는 B-Ready 지표

자료: World Bank Enterprise Survey

□ [표 9]는 한국 기업들이 노동 유연성, 성과 기반 인사제도, 정부 조달 접근성, 교통 인프라, 시장 집중도 등의 영역에서 동아시아 및 태평양(East Asia and Pacific, EAP) 및 OECD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제약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줌

- 노동 규제의 제약과 관련한 인식 지수는 한국이 82.7로 OECD 평균(74.1)을 상회함
  - 특히 성과가 저조한 비관리직 재배치 및 해고 유연성 지수는 9.3으로 OECD 평균(84.6)은 물론 EAP 평균(37.6)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고용 구조의 경직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 성과 기반 승진제도 또한 51.9로 OECD 평균(59.5), EAP 평균(75.6)에 미치지 못해, 성과 중심 인사문화의 확산이 제한적임을 시사

[표 9] WBES상 한국 기타 부문 지표(2024)

| 지표                                        | 한국   | EAP 평균 | OECD 평균 | 전체   |
|-------------------------------------------|------|--------|---------|------|
| 정부 계약 입찰 요건 준수의 어려움 정도에 대한 인식*            | 54.8 | 55.3   | 49.1    | 45.5 |
| 최대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 지수*<br>(주요 시장이 국제적인 기업 제외) | 83.4 | 76.9   | 69.3    | 77.6 |
| 교통 제약에 대한 인식지수*                           | 81.6 | 78.3   | 77.3    | 72.1 |
| 노동 규제 제약에 대한 인식 지수*                       | 82.7 | 83.3   | 74.1    | 77.6 |
| 성과 저조 비관리직의 재배치·해고(노동 유연성)                | 9.3  | 37.6   | 84.6    | 33.3 |
| 비관리직의 성과 기반 승진(인센티브 제도)                   | 51.9 | 75.6   | 59.5    | 69.6 |

주: \*표는 B-Ready 지표

자료: World Bank Enterprise Survey

-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 지수가 83.4로 OECD 평균(69.3)을 초과하며, 이는 주요 시장에서 소수 기업의 점유율이 높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
- 교통 인프라에 대한 제약 인식(81.6)이 전체 평균(72.1)을 상회하여, 물류 접근성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 요인이 존재함을 나타냄
- 정부 계약 입찰 요건 준수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은 54.8로 EAP 평균(55.3)과 거의 유사하나, OECD 평균(49.1)보다는 높아 행정·규제적 진입장벽이 여전히 중요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표 10]은 한국이 행정·세무 절차의 빈도 및 대응 요구는 낮은 편이지만, 운영·인허가 절차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보여줌

- 운영·인허가에 필요한 평균 기간은 193.1일로 EAP평균(27.2일), OECD 평균(18.4일)은 물론 전체 평균(31.2일)을 크게 웃도는 수준
  - 이는 한국의 투자 실행 단계에서 초기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음을 의미하며, 기업들의 시간적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반면, 고위 경영진의 규제 대응 시간 비중은 0.2%로 OECD 평균(7.7%)에 비해 현저히 낮고, 세무당국 접촉 비중(0.9%)과 점검 경험(6.2%)도 낮은 수준
  - 행정 대응 자체가 빈번하지 않음에도 인허가 등 특정 절차의 소요 기간이 과도하게 긴 점은 절차의 복잡성, 예측 불가능성,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등 구조적 한계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음
- 즉, 한국의 규제 환경은 빈도는 낮으나 절차 단위의 효율성은 떨어지는 비대칭적 구조로, 단순 규제 건수나 점검 횟수가 줄었다고 해서 기업의 실질적인 체감이 반드시 개선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

[표 10] WBES상 한국 규제 및 세금 부문 지표(2024)

| 지표                       | 한국     | EAP 평균 | OECD 평균 | 전체    |
|--------------------------|--------|--------|---------|-------|
| 운영 · 인허가 소요일수            | 193.1일 | 27.2일  | 18.4일   | 31.2일 |
| 고위경영진의 규제 대응 시간 비중       | 0.2%   | 8.5%   | 7.7%    | 8.2%  |
| 보건/안전 점검 경험 비중*          | 6.2%   | 25.3%  | 18.0%   | 30.1% |
| 세무당국 접촉 경험 비중            | 0.9%   | 37.6%  | 8.3%    | 39.2% |
| 세무당국 평균 방문 횟수            | 2.2회   | 1.9회   | 0.1회    | 2.2회  |
| 비관리직의 성과 기반 승진 (인센티브 제도) | 51.9   | 75.6   | 59.5    | 69.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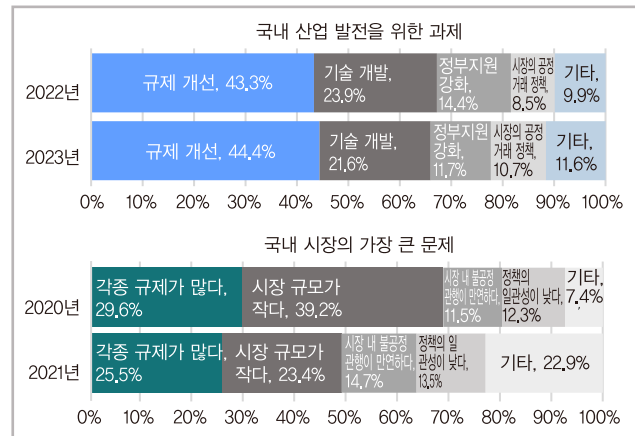
주: \*표는 B-Ready 지표

자료: World Bank Enterprise Survey

□ 한편,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 기업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들은 규제개선과 정책 신뢰도를 핵심 과제로 지적하고 있음

○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투자기업들의 44.4%가 한국 산업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 개선’을 선택

[그림 7]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시장에 대한 인식(단위: %)



자료: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202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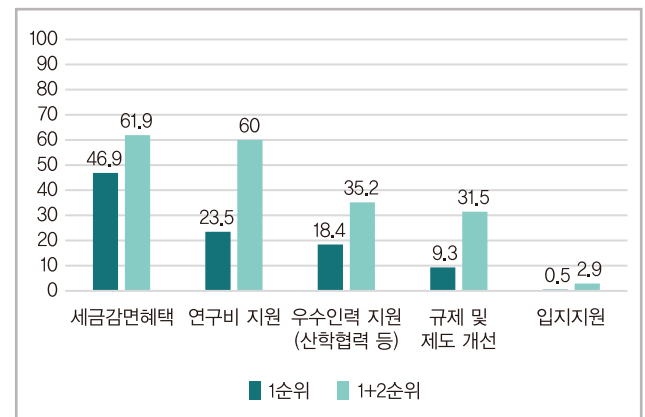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서는 자금(36.5%), 전문인력(28.0%), 관련 제도(16.0%)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8]에 나타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세금감면(46.9%)과 연구비 지원(23.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이는 한국의 인센티브 제도가 정책 방향성과는 일치하지만, 실제 체감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함

– 2020년 기준, 외국인투자기업의 33.6%가 정부의 인센티브가 투자 결정에 ‘중요하다(매우 중요+중요)’고 응답한 바 있음

[그림 8]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



주: 연구개발 수행 외투기업 312개 대상

자료: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2023) 재인용

## 2) 제도 체감과 기업행동 간의 연관성 분석<sup>23)</sup>

□ 분석은 제조업을 대상<sup>24)</sup>으로 하며, 2023년 기업활동조사와 WBES 데이터를 활용

○ 설비투자, 무형자산 등 기업 활동은 기업활동조사, 체감도는 WBES 그룹 평균값(규모, 소유구조 기준)을 사용

○ 동일 기업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단면 자료의 한계를 감안해, 그룹간 평균 차이를 비교하는 t-test 방식 적용<sup>25)</sup>

23) 본 분석은 단면자료를 바탕으로 t-test를 활용하여 그룹 간 평균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며,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식별하는 구조적 모형은 아니므로, 해석은 정책적 정황과 연계한 차이 분석의 수준으로 이해되어야 함 - 10 -

24)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최근 산업정책의 흐름과 설비투자, R&D 등 분석 대상 기업행동의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WBES에서는 서비스업에 대한 산업 분류가 제한적이어서 체감환경의 정밀한 구분이 어려운 점도 고려하였음

25) 회귀모형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등의 문제로 활용하지 않음

- 분석 대상 체감 요인은 2024년 WBES에서 기업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장애요인으로 지목한 ‘금융 접근성(33.9%)’, ‘노동규제(15.8%)’, ‘세금 규제(세율11.4%, 세무행정 9.5%)’ 중심
- 금융 접근성 체감률 30% 이상, 노동규제 체감률 25% 이상, 세금 규제 10.3% 이상을 고체감 기준으로 설정<sup>26)</sup>

[표 11] 분석 대상 기업행동 변수와 전략적 의미

| 변수         | 설명                           | 전략적 의미            |
|------------|------------------------------|-------------------|
| 설비투자 여부    | 유형자산 순증가 여부 (기계, 차량 등)       | 생산능력 확대, 고정자산 확충  |
| 무형자산 증가 여부 | R&D,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의 순증가 | 기술혁신, 중장기 경쟁력 강화  |
| 주력사업 변동 여부 | 사업 구조 전환                     | 사업재편, 구조조정, 환경 적응 |
| 신규사업 진출 여부 | 신규사업 개시 또는 확장 여부             | 신시장 진입, 성장전략 실행   |

- 금융 접근성을 제약 요인으로 인식한 고체감군은 [표 12]와 같이 전반적인 기업행동에서 수행률이 낮게 나타남

- 특히 무형자산 취득과 같은 장기적 투자는 저체감군 대비 20.1%p 낮은 수준
- 설비투자(-4.4%p), 주력사업 변동(-1.3%p), 신규사업 진출(-1.1%p)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표 12] 금융 접근성 체감과 기업행동

| 기업 행동     | 고체감(%) | 저체감(%) | 평균 차(%p) | t값       |
|-----------|--------|--------|----------|----------|
| 설비투자 수행비율 | 88.2   | 92.6   | -4.4     | 6.10***  |
| 무형자산 취득비율 | 37.8   | 57.9   | -20.1    | 16.42*** |
| 주력사업 변동비율 | 3.8    | 5.1    | -1.3     | 2.41**   |
| 신규사업 진출비율 | 2.1    | 3.2    | -1.1     | 2.80***  |

- 주 1) 체감률은 개별 기업의 응답이 아닌, 기업의 규모·소유구조에 따른 그룹 평균값으로 기업이 속한 제도 환경의 평균 체감 정도가 기업행동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로 해석
- 2) 설비투자 수행비율은 2023년 기업활동조사에서 설비유형자산의 증가가 있는 기업의 비율
- 3) \*\*\* p < 0.01, \*\* p < 0.05, \* p < 0.10

- 노동규제를 애로 요인으로 인식한 고체감군은 자본투자 항목(설비·무형자산)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수행률을 보임

- 설비투자(+4.3%p), 무형자산 증가(+4.9%p)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그러나 주력사업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진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 이는 노동규제에 대응해 기술, 설비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선택되고 있으나 구조적 전환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

[표 13] 노동 규제 체감과 기업행동

| 기업 행동     | 고체감(%) | 저체감(%) | 평균 차(%p) | t값       |
|-----------|--------|--------|----------|----------|
| 설비투자 수행비율 | 94.8   | 90.5   | 4.3      | -3.13*** |
| 무형자산 취득비율 | 54.0   | 49.0   | 4.9      | -2.08**  |
| 주력사업 변동비율 | 4.8    | 4.5    | 0.3      | -0.29    |
| 신규사업 진출비율 | 3.1    | 2.7    | 0.4      | -0.54    |

- 주 1) 체감률은 개별 기업의 응답이 아닌, 기업의 규모·소유구조에 따른 그룹 평균값으로 기업이 속한 제도 환경의 평균 체감 정도가 기업행동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로 해석
- 2) 설비투자 수행비율은 2023년 기업활동조사에서 설비유형자산의 증가가 있는 기업의 비율
- 3) \*\*\* p < 0.01, \*\* p < 0.05, \* p < 0.10

- 세율과 세무행정을 경영활동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인식한 기업군은 설비투자, 무형자산 증가, 주력사업 전환, 신규 사업 진출 등 전반적인 전략적 기업행동에서 뚜렷한 위축 경향을 보였으며,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됨

- 세무행정 부담과 조세 체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기업의 중장기 전략적 의사결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26) 각 체감 지표의 전체 분포와 응답 비중을 고려하여 기준값을 설정함

- 단순한 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행정절차, 납세자 편의성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 신뢰 회복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정황적 근거로 해석될 수 있음

[표 14] 세금 규제 체감과 기업행동

| 기업 행동     | 고체감 (%) | 저체감 (%) | 평균 차 (%p) | t값       |
|-----------|---------|---------|-----------|----------|
| 설비투자 수행비율 | 88.6    | 92.6    | -4.0      | 5.55***  |
| 무형자산 취득비율 | 37.8    | 58.9    | -21.1     | 17.44*** |
| 주력사업 변동비율 | 3.8     | 5.2     | -1.3      | 2.60***  |
| 신규사업 진출비율 | 2.0     | 3.4     | -1.4      | 3.43***  |

주 1) 체감률은 개별 기업의 응답이 아닌, 기업의 규모·소유구조에 따른 그룹 평균값으로 기업이 속한 제도 환경의 평균 체감 정도가 기업행동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로 해석  
 2) 설비투자 수행비율은 2023년 기업활동조사에서 설비유형자산의 증가가 있는 기업의 비율  
 3) \*\*\*  $p < 0.01$ , \*\*  $p < 0.05$ , \*  $p < 0.10$

□ 요약하면, 금융 접근성 제약 고체감 기업들은 자본투자와 구조적 전략 전환 전반에서 낮은 수행 비율을 보여, 현재의 자금 조달 환경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 자본조달 경로의 다변화,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접근성 개선이 요구됨

□ 노동규제는 일부 기업들로 하여금 자본 대체 행태를 유도할 수 있으나, 기업의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는 이끌어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자본과 노동의 대체 관계를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함

□ 세금 관련 규제는 기업의 중장기 전략 수립에 있어 전반적인 조세 부담에 대한 인식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 실제 세 부담과 과세의 공정성을 검토하고, 납세 절차의 간소화 및 예측 가능성 향상을 통해 행정 비용을 줄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고려할 수 있음

□ 본 분석은 정량적 비교를 통해 제도 체감과 기업 행동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맥락적 근거를 제시하며, 보다 정밀하고 심층적인 실증 분석은 자료 구득 등 여건에 따라 향후 과제로 남아 있음

## IV. 결론 및 시사점

□ 본 보고서는 글로벌 산업정책 전환과 FDI 재편 흐름 속에서, 한국의 기업환경이 국내외 기업의 경영 및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 비교 지표와 통계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봄

- 규제,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등 제도적 여건과 기업의 체감을 국제 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실제 전략적 행동과의 연관성을 t-test를 통해 보완적으로 검토함

□ 분석 결과, 한국은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일정 수준의 제도·재정적 기반을 구축했으나, 여전히 제도의 신뢰성, 외국인 투자 개방성, 인센티브 등 구조적 측면에서 주요국과 격차가 존재함

- 기업 체감도는 국제 비교 지표에서 확인된 제도적 보완 여지가 있는 영역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며, 일부 기업군에서는 실제 투자 및 전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정량 분석(t-test) 결과가 시사함

□ 특히, 금융 접근성과 노동 및 세금 규제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설비투자과 무형자산 투자 등 전략적 의사결정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제도적 체감 개선의 정책적 중요성을 뒷받침함

○ 다만, 규제 유연성 확대나 FDI 전략 전환과 같은 일부 정책 영역은 정량 분석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국제 비교 지표에서 일관되게 구조적 한계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따라서 제도적 기반 정비와 체감도 개선을 통해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의 안정적 투자 및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①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실증 테스트 베드 구축

- 현행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일부 산업과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있어 전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 외 부문에서는 여전히 규제 신설과 누적이 계속되고 있음
- 제도 전반의 실질적 효과성과 체감도를 검증할 수 있는 지역·산업별 점진적 실증 테스트 베드 구축이 필요함
  -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메가샌드박스’와 같은 프로젝트 단위의 실험적 제도 적용을 통해 전면적 전환 효과를 선별적으로 검증해 나갈 수 있음
- 특히,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 병목 지점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제로베이스 관

점의 규제 검토와 더불어 신산업 중심의 개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실증 결과를 토대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확산 전략을 마련해야 함

#### ② 중소·비우량 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보완과 자금조달 기반의 질적 전환

-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조달 재편 과정에서,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 간 자금 접근성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 담보나 신용도가 부족한 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 및 은행권의 보완적 지원 역할 강화가 필요
  - 기술·무형자산 담보 범위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맞춤형 유동성 지원 강화
  - 지방보조금·정책금융 안내의 단일 창구 통합, 통합 심사체계 도입으로 정보비용 및 접근 장벽 해소
- 중소·혁신 기업도 직접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기반을 넓히는 정책 병행
  - 대기업 계열 CVC<sup>27)</sup>(corporate venture capital), 한국형 BDC<sup>28)</sup>(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등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 플랫폼 제도화
  - 최근 CVC 투자 위축(신규투자 52.8% 감소)<sup>29)</sup>은 제도적 기반 미흡 시 민간자본의 이탈 가능성을 시사
  - 민간자본 유치에 위한 인센티브, 규제 정비 등 직접금융 인프라 개선 필요
-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금산분리 원칙의 탄력적 운용 등 제도적 장벽 완화도 필요함

27)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 투자로 정의되며, 스타트업 성장에 따른 수익확보와 혁신적 아이디어를 취득하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수행

28) 미국에서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직접 투자를 목적으로 1980년에 도입된 제도형 펀드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투자자도 참여 가능하며, 법인세 면제 및 공모펀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 특징

29)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4)

### □ 노동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대응

- 국내 노동시장에 대해 기업은 성과 기반 인사제도와 고용 조정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는 기업의 전략적 대응을 제약할 수 있음
- 성과 중심 인사제도 도입, 직무 기반 보상체계 마련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구조의 체계적 개선이 요구됨
- 「2025년 성장전략」에서도 연공서열 폐지 및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추진을 언급
- 기술개발과 시장선점이 중요한 전략산업에 한정하여 주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조세 인센티브 체감 개선과 예측 가능성 제고

- 투자 인센티브가 기업의 전략적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 체감 가능한 실효성이 중요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반복적인 단기 연장 방식에서 탈피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상시적 제도화를 추진하거나 5년 이상의 장기 일몰 기간을 제도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음
- 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에 대해 R&D와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선도기술 투자를 적극 유도
- 세액공제 활용도가 낮은 기업군을 위해 미국 IRA 사례와 유사한 직접환급(direct pay)방식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하되, 실질적 투자 확대, 고용 창출, 기술이전 등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기여 요건을 명확히 설정
- 형식적 투자나 인센티브 유인만을 목적으로 한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 평가 및 차등제공 원칙을 병행할 필요

### □ 산업·지역 연계형 FDI 전략으로의 전환

- 단순 유치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생태계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DI 전략 마련 필요
- 내외국인 간 협업 구조 및 클러스터 중심의 복합거점 조성 추진
- 첨단산업 특화단지 내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공동 R&D 및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을 투자 인센티브 조건으로 설정하거나 우선 선정 기준으로 반영
-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R&D와 생산이 융합된 복합거점 조성 및 장기적 협력 생태계 구축

[표 15] 시사점 요약

| 국제지표 및 기업체감                                                                                                                                                                                          | 정책적 시사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의 유연성은 국제적 수준을 상회하지만, 여전히 예측성과 일관성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li> <li>●통합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는 단기 일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li> <li>●외국인직접투자(FDI) 개방성은 특정 영역에서 일부 제한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산업 단위의 실증 테스트베드를 통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검토</li> <li>●장기 일몰제의 확정 또는 상시화, 성과에 기반한 차등적 인센티브 설계 방안 마련</li> <li>●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시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세제 적용 가능성 검토 및 기여 요건과 사후평가 연계 방안 모색</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제 지원 규모는 괜찮은 수준이지만, 무형자산 투자를 장려하는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li> <li>●직접금융 시장은 확대 추세에 있으나, 중소기업과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여전히 간접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금융 접근성에 제약이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형자산 및 기술담보 범위 확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강화 방안 마련</li> <li>●정책금융과 민간 자본의 연계(CVC·BDC) 활성화 전략 수립</li> <li>●통합된 안내 및 심사체계 구축으로 정보비용과 행정 시차 해소 방안 모색</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의 노동 유연성은 국제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li> <li>●기업들이 노동 규제를 경험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자본 투자를 선택하는 경향(t-test 결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직무 기반 보상체계 등을 통한 조직운영의 유연성 강화</li> <li>●2025 성장전략의 연공서열 개편 기조와 연계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제고</li> </ul>                                                                          |

# 국내 · 외 경제지표

## 1. 주요국 경제성장률

(단위: %)

|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한국  | 2.7  | 1.4  | 2.0  | 1.0  | 1.5  |
| 미국  | 2.5  | 2.9  | 2.8  | 1.8  | 1.7  |
| 중국  | 3.1  | 5.4  | 5.0  | 4.0  | 4.0  |
| 일본  | 0.9  | 1.5  | 0.1  | 0.6  | 0.6  |
| 유로존 | 3.5  | 0.4  | 0.9  | 0.8  | 1.2  |

주 : 2025, 2026년은 IMF 전망치임

## 2. 주요국 환율

(단위 : 원)

|        | 2022   | 2023   | 2024   | '25. 5월 | 6월     | 7월     |
|--------|--------|--------|--------|---------|--------|--------|
| 원/달러   | 1292.2 | 1305.9 | 1364.4 | 1380.1  | 1350.0 | 1387.0 |
| 원/100엔 | 983.8  | 931.4  | 900.8  | 958.8   | 938.1  | 932.4  |
| 원/위안   | 191.6  | 184.2  | 189.2  | 191.9   | 189.2  | 192.7  |
| 원/유로   | 1357.4 | 1412.4 | 1475.0 | 1571.1  | 1591.8 | 1579.6 |

주 : 말일 기준

## 3. 주요국 정책금리

(단위: %)

|     | 2022      | 2023      | 2024       | '25. 5월 | 6월   | 7월   |
|-----|-----------|-----------|------------|---------|------|------|
| 한국  | 1.25~3.25 | 3.50      | 3.50~3.00  | 2.50    | 2.50 | 2.50 |
| 미국  | 0.25~4.50 | 4.50~5.50 | 5.50~4.50  | 4.50    | 4.50 | 4.50 |
| 중국  | 3.70~3.65 | 3.65~3.45 | 3.45~3.10  | 3.00    | 3.00 | 3.00 |
| 일본  | -0.10     | -0.10     | -0.10~0.25 | 0.50    | 0.50 | 0.50 |
| 유로존 | 0.00~2.50 | 2.50~4.50 | 4.50~3.15  | 2.40    | 2.15 | 2.15 |

## 4. 주요 원자재 가격

(단위 : USD/bbl, p)

|          | 2022  | 2023  | 2024 | '25. 5월 | 6월    | 7월    |
|----------|-------|-------|------|---------|-------|-------|
| 국제유가     | 96.4  | 82.1  | 79.6 | 63.7    | 69.3  | 70.9  |
| CRB 선물지수 | 284.8 | 271.6 | 284  | 290.4   | 297.3 | 299.8 |

주1)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연평균, 월평균)

2) CRB 선물지수는 천연가스 · 금 · 구리 · 니켈 · 옥수수 · 밀 등 주요 원자재 선물가격 평균하여 산출(말일 기준)